

체육 인프라 격차 해소 해주길

윤일모 근대5중 광주시청 감독

새 경기를 맞이할텐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의문들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 체육 분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훈련 환경 격차가 큰데, 모든 지역에서 양질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해주길 고대한다. 또한 엘리트 선수들도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전문 체육의 균형 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



말보다 실천 앞서는 정부 희망

이정래 환경실천연합 전남본부운영위원장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는 안정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자리잡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갈등보다는 화합을, 혼란보다는 질서를 기치로 내걸고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세상'에 되길 희망한다. 환경 분야에서 말만 거창한 공약보다 작은 실천이 모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기대

5·18단체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12·3 계엄으로 무너졌던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정부가 바로 섰으면 한다.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대동 세상도 꿈꿔 본다. 차기 정부는 개헌도 논의 해줬으면 좋을 것이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편향과 왜곡이 없는 세상이 다가오길 기대한다.



분열된 사회, 통합의 사회로

이은후 광주시 남구노인복지관장

어떤 정책이든 내 편, 상대방 정책으로 나눠 진영논리로 볼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분열된 사회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극복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세상 꿈 꿔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

고려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가장 바라는 점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전쟁같은 물리적 충돌이 없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평화가 지켜져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또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차별 없이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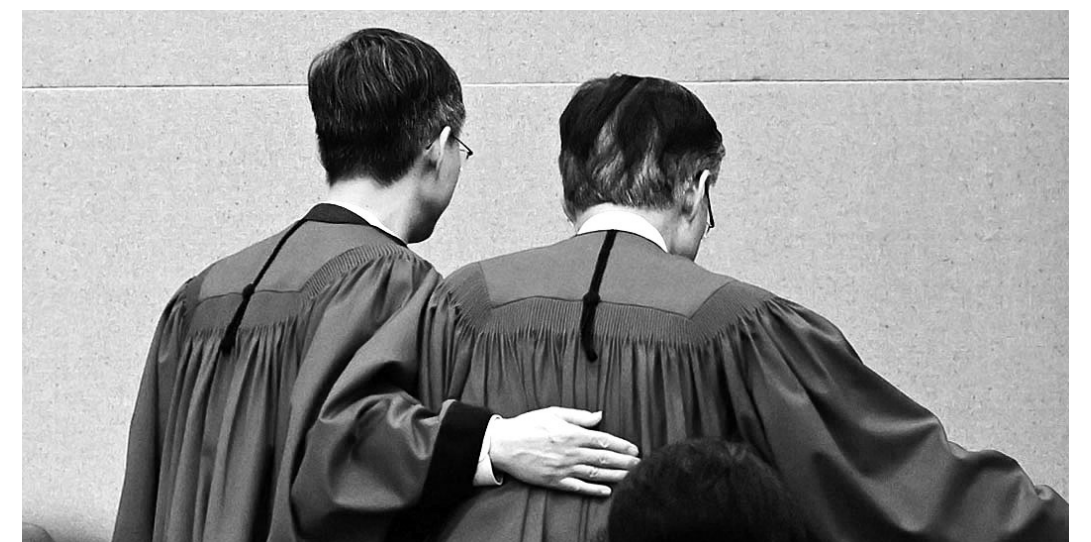
5가지 쟁점 위험·위법 전원일치... “尹, 대한민국민 신임 배반”

현재 ‘국회 탄핵 심판 청구 적법’ 등 피청구인측 절차 문제 제기 불인정 계엄선포·포고령·국회 군 투입 등 탄핵 사유 5가지 법 위반 중대 인정 시민 저항·군경 소극적 임무수행 경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罷免)됐다. 헌법재판소(현재)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중대한 법위반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전원일치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탄핵 소추 절차 정당=현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의 절차적 위법성을 심리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가 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현재는 “내란죄 관련 부분이 소추 사유에 없었다면 국회의 결정적속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에 해당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 3명의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같은 인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

충 의견을 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지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해 입장이 갈렸다. ◇5가지 쟁점 모두 위험·위법= 현재 8명의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 재판관 모두 위험·위법이라고 인용의견을 내놨다. 현재가 판단한 5가지 쟁점은 ‘12·3비상계엄선포’, ‘국회 계엄군 투입’,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확인’ 등이다. 5가지 사항에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다.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선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의 계엄선포였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봤다. 현재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현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권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5가지 쟁점이 모두 중대한 법위반이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큰 이유다.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해 헌법질서를 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봤다. 현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면서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에 내놓은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회·윤 전 대통령 모두 질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재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현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이를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의 행위는 정치적 존중을 해야하고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다. 현재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현재는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라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격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지난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김형두 재판관과 대심판정을 나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역 정치권 “민생·일상 회복 전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광주·전남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하면서 “민생회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두웠던 내란의 밤이 가고 환한 빛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다”며 “먹고사는 문제로 시름 하는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현재의 결정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군경을 앞세워 국민을 배신한 천위쿠데타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면서 “평가진 경제와 외교를 정상화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구하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에 대한 현재의 판단은 국민의 뜻을 실현한 것”이라면서 “파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검찰과 정치 개혁뿐 아니라 사회 대개혁을 통한 전면적 체제 쇄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조기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진보진영의 오픈프라이머리 방식 대선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넘어 개헌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내란 동조세력에 대한 엄벌과 함께 대한민국 운명이 헌법재판관 8명에게 맡겨져 온 국민이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하는 현재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선거제도 개선을 뛰어넘어 빛의 광장에서 쏟아진 울분과 요구, 남태령 농민들 절규까지 모두 담아내는 개헌이 해법이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빠앗긴 일상을 시민이 직접 되찾았으니 서민들의 민생과 노동자들의 노동권,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구해내는 진보정치를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